

도,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관리에 한계… 국가 차원 재정 지원 시급
환경부에 정식 건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가 석면건축물 철거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를 환경부에 공식 요청하며,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오전, 최지선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석면 건축물은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고,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정식 건의했고,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를 통해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 석면건축물은 총 891개소로, 이중 어린이집 58개소, 노인복지시설과 대학교 등 공공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은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그 이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돼

여전히 많은 건축물에 잔존하고 있으며, 노후화에 따라 분진 비산 가능성과 인체 유해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부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도비를 투입해 철거를 지원해왔으며, 3년간 총 16억 원을 투입해 65개소를 정비했다. 하지만 민간시설까지 포함한 전면 철거를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철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6개월마다 유해성 평가와 유해성 측정, 안전관리인 지정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철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석면 건축물에도 국비 50% 지원을 적용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5월부터 연말까지 도



최지선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이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석면건축물 철거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와 관련된 브리핑을 열고 있다.

내 석면 건축물 891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중이며, 점검을 통해 관리 미흡 시설에는 행정조치를, 철거가 필요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140개소를 점검해 8개 시설이 적발된 바 있다.

최지선 도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 차원에

서는 제도 보완 건의와 병행해 철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의 생활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주 국회를 방문해 관련 상임위와 의원실에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전국적인 공동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유성엽 전 의원 별세 민주 도당, 애도 표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남관우 대변인(전주시의회 의장)은 2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유성엽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황망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안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 활동을 벌이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새벽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북 정치의 중진 인사로, 평생을 지역과 국가 발전에 헌신해 왔다. 특히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과 전북 발전 정책에 기여한 바가 크다.

남 대변인은 “고인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대한 뜻을 이어 받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고인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겠다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의 장례 절차와 관련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301호실에 마련되었으며 26일 발인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재가동해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24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재가동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정권교체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성수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전북 새만금의 SK 데이터센터는 4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SK는 2020년 새만금에 2조1,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R&D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가, 송전망 지연과 제도 미비로 사업 추진이 막혀 있다.

특히 에너지 직송형 PPA 등 지역 맞춤형 전력 체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RE100 기반 산업 모델도 표류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투자자 아니냐 전북의 미래산업 전략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라며,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전북 내 재생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로한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4일 서울 영등포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열린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기자 회장(독일)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형 기본소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의회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세미나… 지역소멸·불평등 해소 해법 모색

전북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대표 장연국 도의원은)는 24일 도의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전북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도농 간 소득 격차 등 전북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관승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공유자원을 활용해 전북형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정책실장은 농촌소멸 위기를 지적하며, 농민공익수당·농촌기본소득·생활불복 등 정책의 통해 “농촌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재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가 24일 도의회에서 세미나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일대를 활용한 ‘도민 햇빛연금’ 구상을 제안했다.

장연국 대표위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전략”이라며 “농촌과 도시, 청년과 고령층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도 참석해 전북형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해인 국회의원은 “전북에서 시작되는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향후에도 정책 연구와 공론화를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여름철 수해 예방·대응방안 모색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가 지난 23일 여름철 수해 예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던 남원 금지면, 송동 세전마을 등의 주민대표와 영산강유역 환경청 하천계획과장을 포함한 산림조합장, 대강면

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영태 의장을 비롯해 순종열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종명 도의원이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주민대표들은 양수기 등 장비대여 시 애로사항, 수문 관리 미흡, 주민의



확보를 요청했다.

견 반영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어 남원시와 수자원공사, 환경청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피의자 조사 위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처에서 군사

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사재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례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신병 확보 시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기한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뉴시스

국민 교통권 법적으로 보장

민주 윤준병 의원, 교통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4일, 국민의 교통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통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통 관련 법률은 46개에 달하지만, 교통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은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가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교통복지기금 신설,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마련,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통기본법 제정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기후테크 산업 육성 근거 마련

김정기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후테크(Climature Tech)는 기후(Climatur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돕는 혁신 기술을 뜻한다. 전 세계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원)에서 2032년에는 1,480억 달러(약 200조원)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테크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미래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새롭게 이끌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센터 설치,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후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발굴, 수출확대 등 기업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 공급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정기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실질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의원들, 시정질문 잇따라

화력발전소 철회 입장 등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23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정성철 의원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관련 시민들의 철회 요구에 대한 정읍시의 공식적인 입장, 일방적 사업 강행시 정읍시의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도형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현황과 고령친화 주택 지원사업 검토, 생애보전소 기능 전환에 따른 추진 과정과 재활동실 이용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상길 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정읍시의 대책과 정주 및 생활 인구 확대 방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사업의 내용 변경 증가에 따른 근본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따른 대표적인 성과와 부족한 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읍 지역 공약사항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고, 송기승 의원은 신대인읍의 다양한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목욕탕 시설 확충, 정우면과 신대인읍을 잇는 정우교의 보행자 통행을 위한 대책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서항경 의원은 보행 약자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실태조사와 설치 확대 계획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계획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한성미 의원은 관내 주요 악취 발생 분포현황과 발생 시설에 대한 악취 개선 지원사업 현황, 악취 단속 및 지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악취저감 중장기 대책을 질문하며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